2/ 거품경제와 장기불황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이시이 간지



https://pbs.twimg.com/media/CEHKmbYWoAU5zZN.jpg

이시이 간지(石井寛治) 1938년 도쿄 출생. 도쿄대학 경제학부와 경제학연구과를 졸업했다(경제학박사). 도쿄대학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도쿄대학 명예교수로 있으며, 일본학사원(日本学士院) 회원이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08-362-B00006).

1. 머리말

2013년 4월 일본은행이 경기회복을 목표로 아베 내각과 협력하여 대규모 금융완화를 시작한 지 3년여가 지난 현재 그 성과가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다. 2016년 4월 2일 『아사히(朝日)신문』은 「아베노믹스의 정체감」(アベノミクスに停滞感)이라는 1면 톱기사에서, 3년 전의 금융완화조치로 엔저효과를 누린 자동차 등 수출부문 대기업은 좋은 경영실적을 거두었지만 그 영향이 중소·영세기업에 파급되면서 경제 전체가 호전되는 선순환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즉, 실질임금은 악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증대하면서 개인소비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6년 3월 일본은행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조차도 경기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종합잡지 『세카이』(世界) 4월호도 「아베노믹스 파탄」(アベノミクス破綻)이라는 특집에서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영세기업과 노동자에게까지 흘러들어 소비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별로 없다고 하는 아베 정권의 경제 브레인인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蔵) 전 총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한 후, "구로다(黒田) 일본은행 총재의 '바주카포'도 헛되이 아베노믹스는 파산했다"고 단언했다.[1]

본고는 일본경제가 왜 20년 이상 이토록 장기간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가에 대해 역사적·국제적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산업성 산하의 경제산업연구소가 2016년 간행한 후지타 마사히사(藤田昌久) 편 『일본경제의 지속적 성장』(日本経済の持続的成長)은 전문연구자에 의한 최신의 성과

1 다케나카 전 총무상의 '발언'은 『세카이』(世界)에 수록된 나카지마 다카시(中島隆)의 「세계에서 가장 「대기업」이 활약하기 쉬운 나라 일본: 중소기업에서 본 아베노믹스」(世界で一番"大企業"が活躍しやすい国·日本: 中小企業からみたアベノミクス)의 다음 문장에서 취지를 인용한 것이다. "'저절로 떨어지는 것은 없어요. 입 벌리고 기다려봐야 소용없어요'. 이것은 올해[2016년-인용자] 설날에 방송된 「아침까지 생방송」에서 다케나카 헤이조 씨가 한 발언이에요. 자민당 정권의 경제브레인으로 '반드시 서민에게까지 혜택이 옵니다'라고 낙수효과를 선전하던 사람의 말이에요."(106쪽) 이는 자민당 측 사람들도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데 산업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어서 금융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 책의 서장에서 요시카와 히로시(吉川洋)가 언급하고 있듯이 디플레이션을 장기 경제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는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와는 달리, 이 책은 일본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실물적'(real)인 것이며 일본경제를 성장궤도에 다시 올릴 열쇠는 이노베이션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었다.[2]

본고는 1990년 이후 거품 붕괴에서 시작된 금융시스템 위기가 2000년대에는 생산시스템의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는 2013년 이후 시작된 아베노믹스가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책에 머물고 실물경제의 회복을 이룰 수 없었던 이유를 정치경제사적 시야에 입각해 '일본적 경영'의 변용에 주목하면서 규명하고자 한다.

2. 미소냉전체제의 해체와 거품경제

현재 일본경제 불황의 발단은 1990년대 초의 거품 붕괴까지 소급하여 검토

2 藤田昌久 編,『日本経済の持続的成長: エビデンスに基づく政策提言』, 東京大学出版会, 2016. 3. 요시카와 히로시(吉川洋)는 도쿄대학대학원 경제학연구과 교수, 하마다 코이치(浜田宏一)는 예일대학 명예교수 및 아베 내각 경제보좌관(官房参与). 그렇지만 이 책은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설명하고 장기고용제도가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의 고용정책이 장기고용관행을 무너뜨리는 점은 지적하지 않는 등 견해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 측면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제언이라고 하기 어렵다. 아베노믹스 금융정책에 대한 비판도 많다. 여기에서 알기 쉬운 비판으로 오바타 세키(小幡績),「서프라이즈 연출의 반동이 시작되었다」(サプライズ演出の反動がきている)(『週刊金曜日』 1078호, 2016. 3. 4)의 일부를 인용하기로 한다. "아베노믹스란 이미지 전략으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극단적인 금융 완화, 구로다노믹스[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 총재의 정책-인용자]는 서프라이즈 전략으로 시장을 놀라게 하여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다. 이른바 쇼크로 눈을 뜨게 하는 수법으로 그때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좋지 않다. 왜일까? 먼저 마술은 한 번밖에 통하지 않는데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점. 구로다 씨는 2014년 가을에 추가 완화 '구로다 바주카 제2탄'을 발사하고 올 2월에 마이너스 금리라는 제3탄을 발사했다. 쇼크요법을 세 번이나 사용하면 몸이 망가진다. …일본의 은행도 궁지에 몰리고 있다. 정치가와 그 경제브레인인 이코노미스트들은 마이너스 금리에 의한 수익손실이 지역금융의 개혁 기회라고 속편한 얘기를 하고 있다. 편하게 국채를 보유하게 하지 말고 엄격하게 심사하여 기업에게 대출해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하라며. 그러나 지역금융은 이미 대출할 곳에는 대출하고 있다. …지방의 은행과 금융기관은 목을 졸리고 있는 듯한 위기 상황이다."(16~17쪽)

〈표 1〉 주요국 군사비 지출과 GDP 대비 비율

	1975~1979년 평균		1980~1984년 평균		1980~1984년 평균/ GDP
	100만 달러	%	100만 달러	%	%
세계 합계	528,594	100.0	604,614	100.0	4.7
미국	136,970	25.9	169,104	28.0	6.1
소련	126,120	23.9	136,260	22.5	15.1
서독	25,515	4.8	26,849	4.4	3.4
프랑스	23,962	4.5	27,421	4.5	4.1
영국	23,755	4.5	27,625	4.6	5.0
일본	8,694	1.6	10,506	1.7	0.9

주: 대 GDP 비율은 1980~1984년 각년비의 단순평균. 소련의 GDP는, Maddison, 『세계경제2000년사』의 데이터를 미국과 비교.

출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편, 『SIPRI연감』, 1985년 판.

해야 한다. 일본의 버블붕괴 시기는 소련·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 시기와 겹치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경제가 버블 위기에 처했던 이유는 소련과의 냉전대항 결과로 붕괴 위기에 처했던 미국자본주의를 서방국가 중심으로 구제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의 눈부신 경제성장이 소련 사회주의 내부 붕괴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미소 양국의 경제사회는 냉전 대항에 의한 거액의 군사비 지출로 위기 상황에 빠졌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전반 주요국의 군사비 지출과 GDP 대비 비율을 산출하면 〈표 1〉과 같다. 이 기간에 세계 군사비 지출은 14% 증가했는데, 특히 미국은 23%나 증가했다. 두 시기 모두 미국과 소련이 압도적인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양국의 군사비 지출이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전반의 GDP 대비 군사비 비율은 세계 합계의 경우 4.7%지만, 미국과 소련은 각각 6.1%와 15.1%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데 비해 일본은 0.9%로 매우 낮았다.

소련경제는 1950년대에 연평균 10.6%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7.0%(60년대), 5.4%(70년대), 3.7%(80년대 전반), 2.5%(80년대 후반)로 점차 하락

했고,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 1985년 이후에도 성장률 둔화가 이어졌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거액의 군사비 지출이었다. 미국의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은 베트남전쟁 말기인 1968년 12%대를 정점으로 하락한 데 비해, 소련은 평시에도 미국의 전시 지출을 웃도는 고액의 군사비를 지출했다. 그 때문에 민생부문의 발전은 지연되어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가 보급되지 않았다. 소련의 1인당 GDP를 각국과 비교해보면 일본에 1960년, 홍콩에 65년, 싱가포르에 74년, 대만에 83년, 그리고 한국에는 88년에 각각 추월당했다. 소련의 민중은 서구 선진국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동아시아 신흥국에 추월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3] 그러한 현실을 직시한 소련 민중의 반발로 소련 사회주의가 내부로부터 붕괴하게 된 것이다.

베트남전쟁 이후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점차 감소했지만 레이건 대통령(1981~1987년)이 '강한 미국'을 주창하고 군비 확장에 나서면서 다시 증가했다. 레이건은 군비 확장과 동시에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고 감세를 시행했고 그 세입 부족을 고금리의 국채 발행으로 메우려 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자금이 미국 금융시장으로 몰려들어 달러환율이 상승하고 미국의 무역적자 증대를 초래했다. 당시 미일 간 무역마찰은 자동차를 둘러싸고 심화하고 있었다. 즉 1980년에는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3대 자동차회사 모두가 적자로 전락한 사실이 상징하듯이[4] 미국경제의 근간까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었고, 달러 강세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결과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1985년 9월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 미, 일, 영, 불, 독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였다. 일본에서는 나카소네(中曽根) 내각의 다케시타(竹下) 대장성장관과 스미다 사토시(澄田智) 일본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5개국

3 이상은 中山弘正, 「経済改革(1)Ⅱ ソ連」, 近藤邦康·和田春樹 編, 『ペレストロイカと改革·開放 中ソ比較分析』, 東京大学出版会, 1993, 100~101쪽(여기서 성장률은 생산국민소득의 전년대비 증가율이다). A·マディソン 著, 金森久雄監 訳, 『経済統計で見る世界経済2000年史』, 柏書房, 2004; エズラ·F·ヴォーゲル 著, 渡辺利夫 訳, 『アジア四小龍』, 中公新書, 1993에 의함.

4 宇田川勝, 『日本の自動車産業経営史』, 文真堂, 2013, 제7장.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의 합의에 따라 일본과 서독이 자국 통화를 매수하고 달러를 매도하는 외환거래 협조가 이루어져 1달러에 240엔이던 시세가 이듬해 후반에는 150엔대까지 하락했다. 그래서 1987년 2월 파리 루브르궁전회의에서 달러 하락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과 유럽 국가의 중앙은행 금리를 인하하고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는 금융정책을 통해 달러 매수의 흐름을 만들어 달러가치를 높이는 것에 합의했다. 그에 따라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했는데, 그해 말에 경기과열을 막기 위하여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었다.[5]

그런데 그해 10월에 이러한 상황을 예측한 투자가들은 자금을 미국에서 일본과 서독으로 유출시켜 뉴욕주가시장이 폭락했다.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더욱 더 공조하여 금리인하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 서독은 1987년 12월 기준금리를 일본과 같은 2.5%로 낮춰 미국의 자금유출을 막았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뒤 금리인상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즉 서독의 분데스방크는 경기과열을 우려하여 7개월 후인 다음해 1988년 7월부터 기준금리를 점차 올렸지만, 일본은행은 1989년 5월까지 2년 3개월에 걸쳐 2.5%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주가와 지가에 거대한 거품이 발생한 것이다.

왜 서독과 달리 일본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까? 이것은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가치와 미국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고 예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서독이 거듭해 금리를 올렸던 것에 반해 일본만이 금리인상을 늦추어야 했던 합리적인 이유는 아니다. 일본만이 미국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희생하는,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판단을 한 배후에는 미국이 일본의 방위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 일본은 경제 면에서 미국을 당연히

5 당시 일본은행 이사였던 스즈키 요시오(鈴木淑夫)는 『日本の金融政策』(岩波新書, 1993)에서 "국내경기는 회복하기 시작했다. 2.5%라고 하는 '초'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지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기상승이 가속화되어 인플레이션이 됨으로써 경기가 단명할 위험이 있다. 서독도 당시에는 같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일본은행과 독일 분데스방크(서독 중앙은행)는 그해의 중반부터 가을에 걸쳐 이른바 '고율 시장금리 유도'를 개시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일본과 서독이 초저금리를 시정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리라 예상되었다. 실제로 일본은행의 내부에서는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금융완화가 과도하게 진행되기 이전에 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91~92쪽)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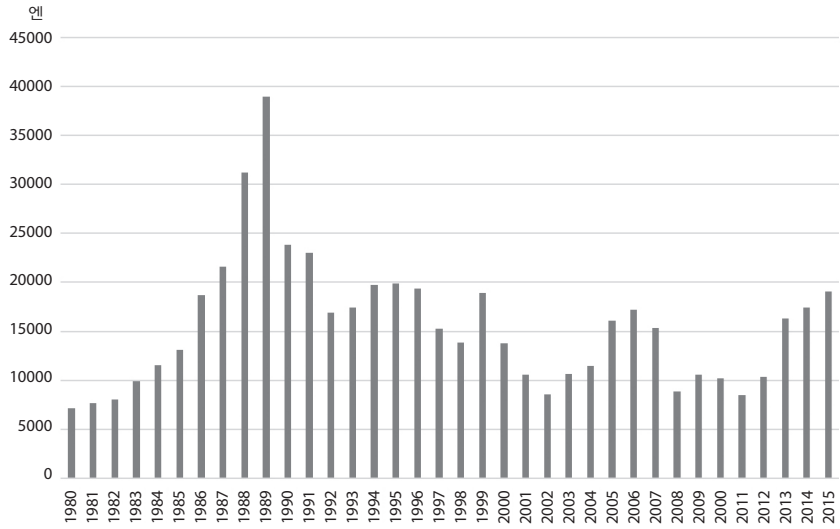
도와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루어온 일본은 그 대가를 이때 톡톡히 치렀다고 할 수 있다.[6]

일본은행 금융연구소는 2014년까지 일본은행 보존 자료에 대해 구체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당시 일본은행은 일반물가가 안정되어 있었기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며 외부의 정치적 압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판단기준으로 하는 '일반물가'에는 주가와 지가 등 자산가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은행이라는 조직에서 자산 거품의 존재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7] 또 외부의 정치적 압력 여부는 일본 대장성과 미국 통화당국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생략한 채 자료가 없으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식의 보고는 역사학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당시 미국의 국제금융담당자 및 서독의 재무부차관과 실제 협상을 거듭했던 교텐 도요오(行天豊雄) 대장성 재무관은 "블랙 먼데이(주가대폭락)로 패닉이 되었을 때 금융정책의 전환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은행에는 안 된 일이었지만 정책전환의 시기를 완전히 놓쳐버렸다.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다. 일본은행의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국을 포함한 정치적 압력이 그렇게 세게 나오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느낌이었다"[8]고 회고한다. 미국의 정치적 압력이 대장성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을 좌우했음을 명확하게 증언

6 이 문제는 제2차 대전 후의 일본경제가 가전제품과 자동차라는 내구소비재가 보급되는 고도소비사회로 진입하게 된 것이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고도성장(1955~1973)과 안정성장(1974~1985)의 2단계 장기적 고성장을 거친 결과라는 필자의 견해와 관련되어 있고, 종래의 고도성장론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石井寛治, 『資本主義日本の歴史構造』, 東京大学出版会, 2015, 제12장 참조.

7 伊藤正直 · 小池良司 · 鎮目雅人, 「1980年代における金融政策運営について: アーカイブ資料等からみた日本銀行の認識を中心に」, 『金融研究』 제34권 제2호, 日本銀行金融研究所, 2015, 119~120쪽. 나는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은행 금융연구소 고문으로 고문회의가 끝난 후 스미다(澄田) 총재와 점심식사를 하곤 했다. 어느날 특별고문인 다치 류이치로(館竜一郎) 도쿄대학 교수가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화폐공급이 급증하여 물가와 지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총재가 자산가격 급등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8 日経ビジネス 編, 『真説バブル』, 日経BP社, 2000. 스미다 일본은행 총재는 전 대장성 차관으로 일본은행 내에서는 대장성의 의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최근의 『도쿄신문』(東京新聞)의 「전후 70년 되살아나는 경제비사」(戦後70年甦る経済秘史)는 2015년 12월 16일 조간의 「일본은행 공백의 1년」(日銀空白の1年)에서 1988년의 일본은행 간부회의가 "금융공황을 경계하는 미국을 배려하여 대장성은 금리 인상을 유예하도록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인상계획이) 철저하게 형해화하고, 경기과열의 문제에 대해 이사들이 침묵하고 있던 사실을 밝혔다.



〈그림 1〉 닛케이 평균주가 추이

출처: Historical Data · 닛케이평균 프로필.

하고 있는 것이다.

닛케이 평균주가는 〈그림 1〉과 같이 1980년 7천 엔대에서 1987년에는 2만 엔대로 상승했지만, 1988년부터는 더욱 급상승하여 1989년 말에 3만 8천 엔대가 되었다. 외국계 금융기관이 진출하여 대도시의 지가도 상승했고, 1990년 말까지 도쿄권에서 오사카권, 나고야권, 그리고 지방까지 지가가 급상승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대기업에 대출이 어려워진 은행이 이러한 지가 급상승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스미토모(住友)은행을 선두로 토지담보가 있으면 심사 없이 대출하고, 직접 거래하기 어려우면 계열사인 '논 뱅크'(대금업)를 통해 대출했다. 증권사도 노무라증권을 선두로 계열의 논 뱅크를 통해 활발하게 토지담보금융 사업을 전개했다.

1989년에 들어 지가와 주가의 폭등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자 일본은행도 드디어 5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고, 미에노 야스시(三重野康) 총재가 취임 직후인 1989년 12월부터 1990년 8월까지 여러 차례 인상하여 기준금리가 6.0%로 된 결과 마침내 그 격심했던 거품도 붕괴하게 되었다.

3. 국제금융규제하 은행의 불량채권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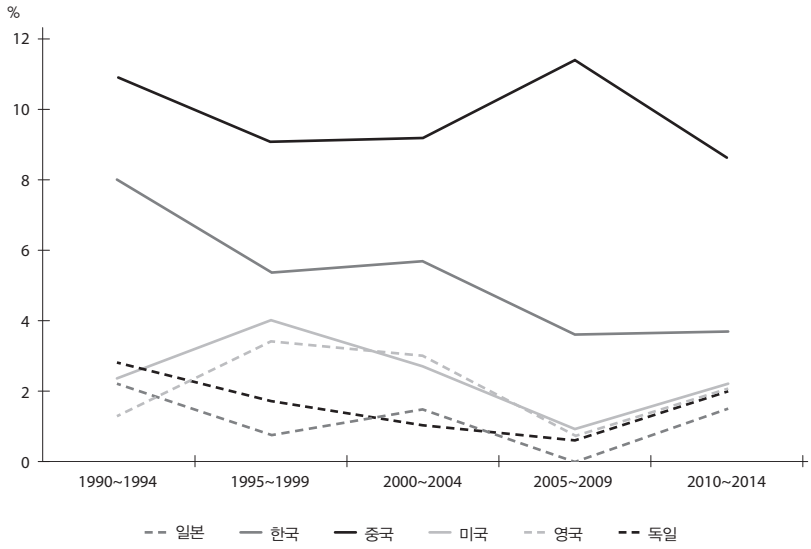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증권사와 시중은행의 스캔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먼저 드러난 것이 노무라증권 등 대형 증권사가 대규모 투자자에게 투자 손실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준 사건이었다. 더욱이 노무라증권 사장이 대장성의 양해를 얻어 손실보전을 했다고 발언하면서 큰 문제가 되었다. 그 외에도 노무라증권은 조직폭력단에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스미토모은행은 거래처인 중견 종합상사 이토만(イトマン)에 조직폭력단과 관련된 부동산 대출로 거액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잇달아 밝혀졌는데, 정부는 경영자와 더불어 정부가 책임추궁 받는 것을 두려워해 공적자금 투입을 미루었기 때문에 증권회사와 은행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리하여 1997년 말부터 1998년까지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야마이치(山一)증권, 홋카이도타쿠쇼쿠(北海道拓殖)은행, 일본장기신용은행, 일본채권신용은행 등 거대 금융기관이 파산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은 통합을 진행하여 미즈호(みずほ),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 미쓰비시도쿄UFJ의 세 거대은행(mega bank)이 탄생했다. 부실채권 처리는 세 거대은행의 설립으로 완료될 전망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신용경색은 국제적인 은행규제의 영향이 컸다.

즉 1988년 스위스 바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BIS)에 각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은 유가증권 '함익'(함유이익)의 50%까지 더한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이 BIS 규제의 실질적인 목적은 당시 활발하게 전개되던 일본 유력 은행들의 해외활동을 제한하는 데 있었다. 1990년 당시 BIS에 보고된 각국 은행의 국제부문 자산 잔액 중 일본은행들의 점유율이 무려 35%였는데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여 1998년에는 18%로 독일계 은행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9]

거품 붕괴 후 일본 유력 은행은 보유한 주가의 가격이 폭락하여 함익

9 『三井住友銀行十年史』, 三井住友銀行, 2013, 123쪽.



〈그림 2〉 주요국 GDP 성장률 추이
출처: UN통계(http://data.un.org).

이 급감했는데, 특히 1997년부터의 금융위기 때에는 주가 대폭락을 겪으면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려고 대출 회수에 주력한 결과 1년간 48조 엔에 달하는 대규모의 신용수축을 초래했다. 그것이 1998년부터 일본에서 장기불황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다고 한다.[10] 그렇다면 거품 붕괴 후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은 일본의 유력 은행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의 거대 은행자본에 대항해 과감한 국제경쟁을 시도하다 실패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거품의 붕괴는 부실채권의 누적을 낳고 금융시스템을 크게 변화시켰다. 그 때문에 당시의 연구자들 가운데는 1990년대 위기의 본질이 금융시스템에 있으며 생산시스템은 건전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었다.[11] 그러나

10 菊池英博, 『そして, 日本の富は略奪される: アメリカが仕掛けた新自由主義の正体』, ダイヤモンド社, 2014, 131~134쪽.

11 橘川武郎, 「橋本寿朗が遺したメッセージと日本経済再生の方向性」,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紀要, 『社会科学研究』 제54권 제6호, 2003, 93쪽.

〈그림 2〉와 같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미국, 유럽 국가 및 인근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크게 부진한 것을 보면, 위기가 생산시스템의 내부에까지 미쳤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1955년부터 1985년까지의 장기 고도성장을 지탱해왔던 '일본적 경영'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일까?

4. 장기고용관행에서 단기고용관행으로 전환

일본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장기적인 소비침체와 설비투자 침체의 두 부문에서 비롯됐지만 각각의 원인이 충분히 규명된 것은 아니다. 우선 소비침체의 원인을 보면, 부진한 경영실적을 회복하려는 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임금억제와 고용축소를 단행하여 1998년에는 평균임금이 제2차 대전 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과 파견·하청·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를 대체하여 일본적 고용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장기고용의 관행이 뿌리부터 흔들린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12]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총고용자 수는 점증하고 있었지만 비정규직 고용자는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었고 정규직 고용자 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1995년 5월에 한국의 경영자총연맹에 해당하는 일본경제연맹(日本経済連盟)이 『새 시대의 '일본적 경영': 도전해야 할 방향과 그 구체 방안』(新時代の'日本的経営': 挑戦すべき方向とその具体策)이라는 보고서를 공표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고용포트폴리오'라는 발법을 제기했다. 이것은 투자종목의 분산이라는 포트폴리오의 발상을 고용형태에 원용하여 정규고용만이 아니라 파트타이머, 계

12 伊藤正直, 「暗転と「再生: 1992~2001年」, 森武麿·浅井良夫·西成田豊·春日豊·伊藤正直, 『現代日本経済史〔新版〕』, 有斐閣, 2002, 278~286쪽. 또한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1년의 종업원 규모별 비정규고용 비율은 1~29명 40.1%, 30~99명 37.4%, 100~499명 34.8%, 500~999명 34.2%, 1000명 이상 32.6%로 최대규모 사업소에서도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었다(http://www.mhlw.go.jp). 따라서 장기고용관행은 대기업에서도 붕괴되기 시작했다.

〈표 2〉 정규고용과 비정규고용 노동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

연도	정규고용	비정규고용(A)	합계(B)	A/B(%)
1984	3,333	604	3,937	15.4
1989	3,452	817	4,259	19.1
1994	3,805	971	4,766	20.3
1999	3,688	1,225	4,913	24.9
2004	3,410	1,564	4,974	31.4
2009	3,395	1,727	5,122	33.7
2014	3,278	1,962	5,240	37.4

출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非正規雇用の現状と課題」.

약직, 파견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조합할 것을 제안했다.[13] 당시의 저널리즘은 "당연한 지적이 많지만 총 인건비 억제의 뜻이 강해 숨막힌다"[14]는 비판적인 평가와 더불어 기존의 장기고용관행이 무너지는 것을 염려했다.

이 보고서가 끼친 영향에 대해 당시 일본경제연맹 상무이사였던 나루세 다테오(成瀬健生)는 후년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토지의 버블 붕괴와 플라자합의에 의해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을 지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업이 어떻게 생존하느냐는 것이 발상의 원점. …좀 안이했다면 그렇다 할 수도 있는데, 비정규직이 전체의 20%라면, 그 사람은 불황이 되어 해고되어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 지금[2010년 10월]처럼 35%가 된다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15% 되는 거죠.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유감스럽지만 안이했던 우리의 예상[비정규직 비율]인 20%를 1% 넘을 때마다 그만큼 사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는 것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플라자합의에서 엔화를 절상한 것이다. 석유위기 이후 임금문제연구위원회 보고 등에서 우리가 그토록 임금을 올리지 않고

13 八代充史ほか 編, 『新時代の日本的経営: オーラルヒストリー』, 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15.
14 『日本経済新聞』 5. 23.

원가 상승을 피하려고 했는데 엔고로 전부 소용없게 되어버렸다.[15]

일본경제연맹 보고서가 엔고 불황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비정규 고용으로의 전환이라는 안이한 방안을 제안하고 많은 기업이 그것을 재빠르게 받아들인 것은 분명하다. 나루세가 회고하는 석유위기 때는 노조가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경영자 측은 고용을 보장하여 양측이 협조했다. 그렇지만 거품경제 붕괴 이후에는 엔고라는 외압을 이유로 경영자 측은 일방적으로 임금억제를 강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영자 측의 의견에 대응하여 렌고(連合, 일본노동조합총연합)의 종합생활개발연구소 스즈키 후지이치(鈴木不二一)는 노동자 측 의견을 다음과 같이 대변했다.

장기고용과 연공임금에 의해 인적자원을 축적하는 것은 기업 내에서 종업원의 충성심을 조성하는 데는 참으로 편리한 구조다. 그러나 해고의 곤란과 직능자격제도는 필연적으로 인건비의 고정화와 과잉인력의 발생 등 문제를 발생시킨다. 동시에 기업은 고정적인 노동력만으로는 장래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어렵다. …나는 정규직 유도는 그것은 그것대로 내걸어야만 하는 깃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다양한 고용형태가 생겨나고 비중이 늘어나는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곤란해질 수 있다. 시장의 논리를 무시해서는 우리 조합원이 활동할 수 없고 새로운 고용형태도 아마 구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16]

스즈키 후지이치의 발언은 언뜻 보면 경영진의 의견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비정규직 증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렌고의 입장에서 보면 '정사원 유도'(비정규직의 정규화)라는 기치를 내걸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

15 八代充史ほか 編, 『新時代の日本的経営 オーラルヒストリー』, 91, 95, 97, 98쪽.
16 八代充史ほか 編, 『新時代の日本的経営 オーラルヒストリー』, 36, 338쪽.

실성 없는 구호로 추락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원래 일본의 노동조합은 정규직 중심의 조합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임하는 자세가 부족했기에 비정규직의 증가가 노동조합 쇠퇴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적 경영의 특징인 장기고용관행이 변화하는 것은, 재계의 주장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정부의 노동정책의 변화가 그 전제 조건이다. 1996년에 등장한 하시모토(橋本龍太郎) 내각과 2001년에 시작된 고이즈미(小泉純一郎) 내각은 경제개혁에 대해서는 정부규제의 전면적 완화를 내세워 시장원리주의적 '신자유주의 노선'[17]을 채택했다. 1996년에는 노동자파견법 개정에 의해 그동안 비서, 통역,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용기기 조작 등 16개의 전문업종에 국한됐던 파견 대상업종이 26개로 늘어났다. 또 2004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파견 근로기간이 1년에서 3년까지 연장되었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제조업 현장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면서 기업이 정규직을 해고하고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전후 일본의 파견근로는, 모집인이나 소개업자가 여성노동자를 공장에 보내 심하게 중간착취를 했던 이전의 쓰라린 경험을 반성하여 제한해왔으며, 1986년 노동자파견법도 고도의 전문능력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 법이 인건비 삭감의 수단으로 적용범위를 넓힌 것이다. 2015년 9월에 시행된 개정 노동자파견법에서는 그동안 직장에서 무기한으로 일할 수 있었던 '전문 26개 업무'의 파견사원이 원칙적으로 3년밖에 일할 수 없게 되어 파견사원의 입지가 더욱 약화되었다.[18]

17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에는 1970년대 후반 이후의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와 같이 경제운영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케인즈주의적인 정책 개입을 극도록 배제하는 '시장원리주의' 유형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정책 개입을 인정하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대륙의 '사회적 시장경제' 유형도 있다. 후자는 사회민주주의의 연장성에 있어 노동시간과 고용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의향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메커니즘이 확립되어 있다. 이상의 두 유형에 관해서는 権上康男, 「現代史のなかの新自由主義: 並存する2つの潮流」, 『歴史と経済』 제229호, 2015. 10 참조.

18 개정 당시 파견사원은 전국적으로 약 126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전문성이 높은 26개 업무에는 약 49만 명이 있었다. 대기업에서 연구직으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은 "다른 연구기관으로 옮기면 지금 이 회사에서 익힌 노하우가 리셋되어 버린다"고 걱정하고 있다(「雇い止め 専門職も不安」, 『日本経済新聞』 2015. 7. 9 조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森本卓郎, 『雇用破壊 三本の毒矢は放たれた』, 角川新書,

정규직의 노동환경도 악화되었다. 2006년 제1차 아베 내각 당시 후생노동성의 노동정책심의회는 화이트칼라를 시간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화이트칼라-적용제외'로 불리는 노동시간규제의 적용제외를 일본 후생노동성은 장시간 근무한 다음날 2시간만 근무하는, 즉 유연하게 일하는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 법안화하려 했다. 하지만 노동자 측이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고정화하는" 것이라고 맹렬히 반대해[19] 법안 제출을 포기했다. 그러나 제2차 아베 내각은 '고도전문가제도'라는 이름으로 바꿔 그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개정안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일본기업은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하더라도 직무분담이 애매한 팀플레이의 관행을 계속하는 한 개인업무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장시간 노동이 초과근무수당 없이 더욱 강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20]

2004년 근로기준법 개정에서는 노동자 해고에 대해서도 그동안 일방적으로는 불가능하게 했던 해고를 합리적 이유만 있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21] 하지만 일본의 경우 정리해고는 재판에서 해고권 남용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해고가 쉽지 않다. 제2차 아베 내각은 무효판결이 나온 경우에도 노사가 '합의금'[解決金]으로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22] 비정규 노동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증가가 문제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비정규 노동을 계속한 중장년층 현역세대의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1971~1974년 제2차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단카이(団塊) 주니어 세대로 대표되는 중장년층은 1990년대 초의 버블 붕괴 이후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했으나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파견이나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된 경우가 많았다.[23] 일본의 경우

2016, 92~103쪽 참조.

19 「雇用ルールを問う 第1部 きしむ戦後制度① 『労働時間』どこまで」, 『日本経済新聞』 2006. 8. 16 조간.

20 森本卓郎, 『雇用破壊 三本の毒矢は放たれた』, 103~108쪽.

21 菊池英博, 『そして, 日本の富は略奪される: アメリカが仕掛けた新自由主義の正体』, 145~146, 155~156쪽.

22 森本卓郎, 『雇用破壊 三本の毒矢は放たれた』, 108~118쪽.

23 雨宮処凛 外, 『下流中年: 1億総貧困化の行方』, SB新書, 2016, 22, 67쪽.

대기업이 신규 대학졸업자가 아니면 채용하지 않는 노동시장의 특질이 강고하기 때문에[24] 일단 정규고용 궤도에서 벗어나면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어렵다. 정부는 고용의 유동화를 주창하면서 직업소개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헬로 워크(Hello Work, 공공직업안정소)를 설치했지만 그 기능은 미흡하고 좀처럼 채용과 연결되고 있지 않다.[25] 비정규노동을 계속하는 중고년층은 해고를 두려워하면서 저임금으로 일하며, 체력의 쇠퇴를 느끼며, 결혼과 인간관계의 기회도 점차 잃어가 생활이 "서서히 고통스러워지고 있다."[26]

이상과 같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정규고용을 포함한 노동자의 생활이 불안정하고 급여수준이 저하한다면 노동자 측은 가급적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장래에 대비하려는 것이 당연하다. 일본의 명목임금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1998년 이후 저하하고 있고,[27] 급여의 일부를 저축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기업들의 인건비를 절약하게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국내 소비의 정체를 초래하여 기업 자체의 발전기반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5. 기술자·경영자에 의한 이노베이션 부진

플라자합의에 의한 엔고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주변 국가에 대한 일본경제의 경쟁력도 현저히 저하시켰다. 일본경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수요창조형 이노베이션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일본 기업은 인원 감축에 의한 인건비 절약을 통해 경비 삭감을 도모하는 임시방편적인 대응책을 시행했다. 인원 감축은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힘을 약화시켜 일본경제의 불황 탈출을 어렵게 했다.

24 菅山真次, 「人事管理: 新規学卒採用の展開」, 佐々木聰·中林真幸 編著, 『講座·日本経営史③組織と戦略の時代 1914~1937』, ミネルヴァ書房, 2010.
25 雨宮処凛 外, 『下流中年: 1億総貧困化の行方』, 236쪽.
26 雨宮処凛 外, 『下流中年: 1億総貧困化の行方』, 70쪽.
27 吉川洋, 『デフレーション―「日本の慢性病」の全貌を解明する』,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3, 174쪽.

예를 들어 스즈키 준(鈴木潤)에 따르면[28] 일본 내의 특허출원은 2001년 약 44만 건을 정점으로 2014년에는 약 33만 건으로 감소했고, 일본 연구자의 발표논문 수도 2004년을 정점으로 2012년까지 5% 감소했다. 그 사이에 세계 전체 특허출원 수와 발표논문 수는 각각 1.7배와 1.5배로 증가했기에 일본의 비중은 급락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주요국 가운데 논문 수가 감소한 나라는 일본뿐이라는 점이다. 그 원인으로 대학연구자의 연구시간이 교육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부담 증대로 최근 10년간 약 3/4으로 감소한 것과 특정 대규모 대학으로 연구자금이 집중한 결과 연구의 생산성이 오히려 저하한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

대학과 기업의 연구활동과 기술개발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기업의 이노베이션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기업의 내부 사정에 밝은 당사자의 회고에 기초하여 일본 기업의 어떠한 문제가 이노베이션의 실현을 방해했는지 알아보자. 먼저, 1987년부터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에서 반도체 개발을 담당한 유노가미 다카시(湯之上隆)의 회고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노가미가 반도체기술자가 된 1980년대 중반은 일본의 반도체산업이 세계 최강이었고, DRAM메모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유노가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29]

> 이 DRAM은 당시 대형 컴퓨터와 전화교환기 등에 사용되었다. 그때 대형 컴퓨터제조회사 및 전전공사(電電公社, 현 NTT)는 "망가지지 않는 DRAM을 가져오시오"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대형 컴퓨터용으로는 25년간 보증, 전화교환기용으로는 23년간 보증을 요구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일본 반도체기업이 그러한 엄격한 신뢰성을 실현하는 고품질의 DRAM을 정말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일본은 압도적인 점유

28 鈴木潤,「やさしい経済学 イノベーションを考える 第2章 日本の技術力⑦⑧⑨」,『日本経済新聞』2015. 12. 12, 16, 17일 조간).

29 湯之上隆,『日本型モノづくりの敗北: 零戦・半導体・テレビ』, 文春新書, 2013, 60~61쪽.



출처: http://ironna.jp/article/3111

율을 획득했다. 그때 구석구석까지 기술의 극한 성능을 추구하고 고품질의 DRAM을 생산하는 일본 반도체기업의 기술문화가 자리잡았다.

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 대형 컴퓨터를 대신하여 개인용 컴퓨터(PC)가 보급되어 DRAM의 주요 수요처가 되었는데도 일본의 반도체기업은 대형 컴퓨터용으로 제조한 25년 보증의 고품질의 DRAM을 PC용으로 계속 판매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기업은 PC용의 저비용 DRAM을 대량생산한 한국 삼성전자 등의 기업에 추월당했다. 유노가미는 일본 반도체기업이 갖고 있던 '일본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는 생각은 근거 없는 신화라고 한다. 즉 기술력이란 고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기술력만이 아니라 저비용으로 만드는 기술력, 단시간에 만드는 기술력 등 다양한 평가기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특정 평가에만 주목하여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노가미가 일본 반도체기업에서 삼성전자로 전직한 기술자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신기술 개발력은 일본이 앞서지만 양산 기술력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개발할 때 여러

팀이 경쟁하고 양산 가능한 개발성과를 거둔 팀은 그대로 양산 담당부서로 이동시켜 개발과 양산을 일체화함으로써 단시간에 저비용으로 제조하는 기술력을 향상시켰다고 한다. 그에 비해 일본 반도체기업은 연구소, 개발센터, 양산공장으로 위계조직이 형성되어 조직 간의 벽이 높고 양산공장이 가장 아래 자리로 보이기에 인기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기술력의 구조하에서는 일본 반도체기업이 한국과의 경쟁에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1999년에는 위기에 직면한 일본 반도체기업을 구하려고 히타치와 NEC가 합작하여 DRAM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엘피다메모리를 설립했다. 히타치에서 이 회사로 파견된 유노가미는 거기에서 NEC와의 기술개발을 둘러싼 경쟁에서 져 1년여 뒤에 히타치를 퇴사했다. 엘피다메모리는 판매는 증가했지만 이익이 저조하여 2012년에 도산했다. 도산할 당시 엘피다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엘피다의 기술력은 높았지만 DRAM 가격의 하락과 역사적 엔고 등에 의해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유노가미는 외부환경의 악화를 도산의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경영자로서 잘못된 것이고 도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저비용으로 DRAM을 만드는 기술력을 향상시키지 못한 점에 있었다고 지적한다. 퇴직한 후 도시샤(同志社)대학 교수가 되어 엘피다메모리를 조사한 유노가미는 변함없이 과잉기술, 과잉품질, 세계에서 가장 비싼 DRAM을 제조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 회사는 그의 지적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또 하나 인용하고 싶은 것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소니에 근무한 하라다 세쓰오(原田節雄)의 경영에 대한 비판적 회고록이다.[30] 소니는 이부카 마사루(井深大)와 모리타 아키오(盛田昭夫)의 콤비에 의해 앞선 기술개발력을 가진 세계적인 전자기기 기업으로 발전한 회사다. 하지만 1982년부터 1995년에 걸쳐 음악가 출신의 오가 노리오(大賀典雄) 사장 시절에 사업본부제를 도입하여 각 본부에 제조만이 아니라 판매책임을 부과하여 기술중심이던 소니의 체질을 개선하려 했고, 미국의 CBS레코드와 콜롬비아영화사를 인

30 原田節雄, 『ソニー 失われた20年: 内側から見た無能と希望』, 株式会社さくら舎, 2012.

수하여 하드 분야만이 아니라 소프트 분야를 포함한 2대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오가의 경영개혁은 소니를 경영위기에서 탈출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31] 하라다의 비판적 회고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오가 사장의 뒤를 이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사장과 회장을 역임한 이데이 노부유키(出井伸之)의 경영방식이었다. "소니의 경영 부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오가 체제에서 이데이 체제로 사장이 교체된 1995년 이후입니다"라고 언급한 뒤에 하라다는 이데이 사장 아래에서 형성된 경영과 현장의 '신분 차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32]

> "필자 나름대로 이해한 최근 소니의 계급적 신분 차별은 크게 나누어 회장과 가까운 사원들과 회장과 소원한 관계의 사원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보통 경영과 현장에서는 일단 한 쪽으로 건너가면 다른 한 쪽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양쪽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이 소니의 사풍(社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적 신분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부카와 모리타가 1946년에 소니의 전신인 도쿄쓰신코교(東京通信工業)를 설립할 당시의 취지문에는 "자유활달하고 유쾌한 이상적인 공장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장주의 전통이 사라진 것을 하라다가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니 상품의 디자인은 모리타 사장(1971~1976년) 시절부터 상품 디자이너가 주도하는 디자인회의가 열려 논의 끝에 모리타 사장과 오가 사장이 최종결론을 내리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데이 사장 시절부터는 그러한 원활한 의사소통의 관례가 무너졌다. 또한 완구용 로봇 개발이 진행되던 1999년에 의족과 의수를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의 개발을 제안했는데, 당시 개발책임자는 단번에 이를 무시해버려 사회공헌용 로봇을 개발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대형 비즈니스 기회를 놓쳐버렸다

31 生島淳, 「大賀典雄: ソニーの組織改革者」, 宇田川勝 編, 『ケース · スタディ: 戦後日本の企業者活動』, 文眞堂, 2004.

32 原田節雄, 『ソニー 失われた20年: 内側から見た無能と希望』, 114~115쪽.

고 한다. 하라다는 "이데이 노부유키가 임원이 된 후에 소니는 기술자를 위한 사내 도서관을 폐지하고 우수한 연구자의 근거지로 기초연구를 계속해 온 소니 중앙연구소조차 발전적 해체라고 하는 대의명분 아래 해체했다"[33] 라고 비판한다. 또한 2003년에 소니가 감독이사와 집행이사를 분리하는 '위원회등설치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것도 기술자 출신을 경영에 관여시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데이가 시행한 소니의 제도개혁 대부분이 미국의 컨설턴트의 제안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이다. 1994년에 도입되어 이데이 사장이 퇴임한 2005년에 폐지된 '사내컴퍼니제'(사내분사제도, 기업내 사업부문을 하나의 회사처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제도, 소니가 처음 도입—역자 주)에 대한 하라다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34]

> 소니의 사내컴퍼니제는 단순하게 단기적인 성과만을 추구하는 주주의 입장을 배려하여 그것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회장과 사장의 보수를 인상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경영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는 구조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데이 소니는 경영을 각 컴퍼니에 통째로 넘겨주었습니다. … 자신의 생각이 없고 컨설턴트의 의견에 따르는, 경영자에서 벗어나 투자가로서 소니를 조종하려는 생각이 엿보입니다. …소니를 투자은행, 즉 지주회사로 하여 그 톱에 자신이 군림하면서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평가나 계속하는 것입니다.

즉 이데이 체제의 실태는, 현장주의에 입각한 일본적 경영의 '모노즈쿠리'(モノづくり) 정신을 포기하고 주주의 이해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미국적인 단기적 시야의 경영으로 소니를 전환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경영방침을 전환한 결과 소니는 축적된 기술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실적부진으로 2009년 3월 결산에서 2015년 3월 결산까지 누

33 原田節雄, 『ソニー 失われた20年: 内側から見た無能と希望』, 30쪽.
34 原田節雄, 『ソニー 失われた20年: 内側から見た無能と希望』, 140~141, 153쪽.

계 약 1조 엔의 적자가 발생하고 말았다. 그러나 최근 소니는 전자업계 최고의 이익을 기록했으며 히타치와 파나소닉에 이어 경영실적을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분야별로 보면, 가장 큰 이익을 거둔 분야는 소니생명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이고, 스마트폰의 카메라용 이미지 센서를 중심으로 하는 디바이스, 플레이스테이션 4로 대표되는 게임기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때 세계시장을 석권하던 컴퓨터나 텔레비전 등의 전자제품은 경쟁에 뒤쳐져 판매대수가 크게 줄었다. 향후 소니는 '탈 전자산업'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성숙산업이 된 '전자산업'에서 재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이노베이션 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35]

이상의 두 회고는 각각 일본적 경영이 쌓아온 기술과 경영이 1990년대 이후에 직면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히타치의 기술자 유노가미는 일본의 기술력이 고품질의 상품을 만드는 데 전념하고 저비용의 실현에는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격해온 인근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하라다는 소니가 쌓아온 기술력이 미국식 단기이익을 목표로 하는 경영자에 의해 무시된 결과 실적부진에 빠진 점을 비판한다. 기술과 경영의 양측이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수레의 양 바퀴처럼 작동할 때 비로소 기업경영의 발전이 가능하게 되는데,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그러한 두 바퀴의 움직임이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에 의해 협공을 당하는 가운데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일본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6. 대미 종속의 심화와 '일본적 경영'의 위기

이상과 같은 전자산업의 쇠퇴와는 대조적으로 도요타로 대표되는 일본 자동차산업은 줄곧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어 모든 제조업이 부진에 빠진 것

35 「特集 · ソニー 熱狂なき復活」, 『週刊東洋経済』 2016. 1. 30)

은 아니었다. 그 차이의 원인을 가스야 마코토(粕谷誠)는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모듈화'에 의해 일본이 지금까지 유지했던 경쟁우위를 잃어버렸다는 점을 지적한다.[36] '모듈'이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와 같이 반(半) 자율적인 서브시스템끼리 서로 연결됨으로써 복잡한 시스템이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독립성이 강한 부품을 조합하여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모듈러형'(조합형) 기술이라 한다.

반면 자동차처럼 많은 상호의존적인 부품으로 구성되는 제품은, 즉 엔진을 바꾸면 자동차 바디와 현기장치도 변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많은 조정이 필요하고 제조과정에서도 공정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술을 '인티그럴형'(상호조정형) 기술이라 한다.

브라운관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평면 텔레비전(액정 텔레비전)도 '모듈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모듈부품의 조합에 의해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히타치제작소의 엔지니어였던 유노가미는 2002년부터 반도체에너지연구소에서 액정패널 가운데 TFT(Thin Film Transistor, 박막 트랜지스터) 개발을 진행했는데, 전 공정이 500공정(step) 이상인 반도체에 비하면 개발이 매우 간단해, 1개월 정도 지나자 100공정에도 못 미치는 이 TFT의 모든 공정을 혼자서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세계 어느 기업이나 부품과 부품제조장치를 구입하면 액정 텔레비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노가미는 향후 일본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모듈러형'(조합형) 기술에 근거한 산업이 아니라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인티그럴형'(상호조정형) 기술이 필요한 산업에서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37]

이러한 기술이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산업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도요타 생산방식' 연구로 저명한 후지모토 다카히로(藤本隆宏)는 향후 세계 제조업의 방향에 대해 "생산의 비교우위만 아니라 설계의 비교

36 粕谷誠, 『ものづくり日本経営史 江戸時代から現代まで』,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408~409쪽.
37 湯之上隆, 『日本型モノづくりの敗北: 零戦·半導体·テレビ』, 182~183, 211~213쪽.

우위가 무역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조정능력이 우수한 통합형 현장이 많은 일본은 조정집약형의 인티그럴형 제품에서 설계의 비교우위를 발휘하기 쉽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38]

> 기업은 그러한 현장을 존속시키려는 노력을 회사의 경쟁력으로 삼는 현장지향 경영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즉 저성장경제의 기업은 생산성 향상(공정 이노베이션)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수요 창조(제품 이노베이션)로 보완하고 현장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의지를 현장에 명시한다. 그러면 현장도 주저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 매진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대부분은 지금까지도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사장의 수요창조 노력이 두 바퀴처럼 작동하여 경영자와 현장의 상호신뢰가 성립되어 있다. …단기 이익추구로 장기전망을 오인한 일부 대기업 본사는 오히려 우수 중견·중소기업의 현장지향 경영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이다.

후지모토는 이익최대화를 지향하는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기업 그리고 일본의 일부 대기업을 '자본지향기업'이라 하고, 이익과 고용의 양립을 목표로 하는 도요타 자동차·마즈다 자동차 등 지역성이 강한 대기업과 현장의 2층에 사장실이 있는 중소기업을 '현장지향기업'이라 하여, 후자야말로 일본의 21세기 기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본과 현장을 대비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공장현장과 판매활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같은 자동차기업 중에서도 닛산자동차가 '기술의 닛산'이라고 부를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판매의 도요타'에 밀려 판매실적이

38 藤本隆宏, 「分断危機を超えて⑤ 企業と現場, 相互信頼カギ」, 『日本経済新聞』, 2016. 1. 8 조간). 이 기사에서 후지모토(藤本)는 중일 간의 경쟁관계에 대해, 냉전 종결 후에 "중국 제품의 저가격에 직면한 일본기업은 대부분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저가격은 곧 저임금이라고 경영자가 인식하여 생산성에 관한 논의는 망각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지금부터 무역재의 국내 우수현장은 저력을 보일 것이다. 신흥국으로 진출한 경험에 의해 그들과의 임금 차와 생산성 차를 정확하게 알게 된 국내 우수현장은 생존을 위한 목표를 정하고 여러 해 동안 몇 배의 속도로 현장의 물적 생산성 향상을 본격화시켰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중국의 임금이 상승한 결과 "2010년경부터 단위비용 기준으로 중국을 따라잡았다는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게 되었다. 이렇듯 지구전에서 사실상 승리하여 국내 우수현장은 20년 이상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포스트 냉전기의 종언이다"라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검증이 필요하나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는 언급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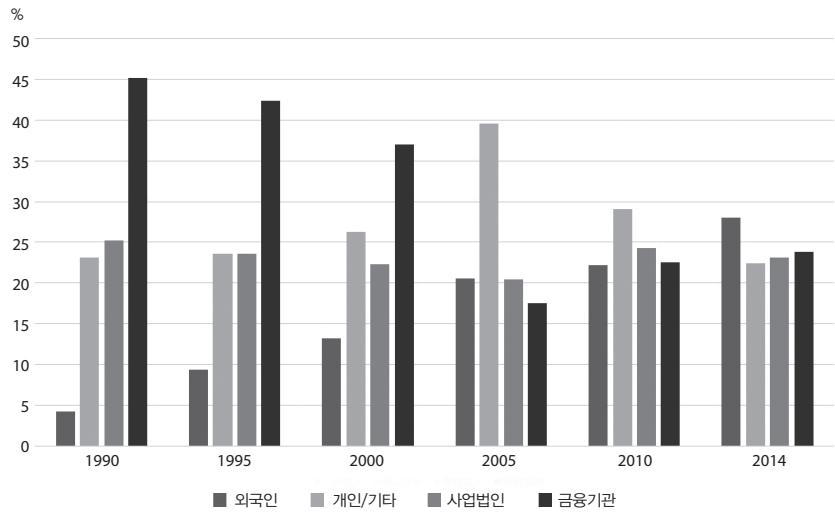
낮아 2조 엔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1999년에 프랑스 르노자동차의 산하에 들어간 사실[39]은 무시하고 있다. 물론 기술과 경영의 두 바퀴가 서로 잘 맞아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플라자합의라는 서방국가의 지원을 받아 미국경제가 살아난 것은 아니었다. 미일 간의 자동차 마찰이 심해지면서 1995년 5월 미국 정부는 일본시장의 폐쇄성을 이유로 도요타의 '렉서스' 등 고급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것을 회피하려면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부품의 구매를 확대하라는 강압이 있어 양국 정부 간에 치열한 협상이 있었다. 결국 일본의 자동차기업이 자발적으로 미국에서의 현지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공표하는 형태로 타협했다. 그 후 일본 업체는 현지생산을 확대하고 기술이전과 고용창출 면에서 미국경제에 기여했기 때문에 미일 자동차 마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렇지만 미국 자동차산업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2008년 리먼쇼크가 발생했을 때 GM과 크라이슬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정치력으로 외국의 라이벌을 누르더라도 경쟁력 자체를 향상시키지 않는 한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40]

현재 미국에는 군수산업, 정보산업, 금융업 등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인 우위를 자랑하는 산업 분야가 없어진 만큼 미국경제는 세계 각국의 투융자에서 점차 활로를 찾게 되었다. 미국의 금융업 활성화의 기초에는, 미국 내 금융업 외의 기업에서 '이익과 감가상각' 중 이자·배당 등 '금융시장으로의 지불'이 차지하는 비율이 1960년대 초반 평균 20%에서 1970년대 평균 30%를 거쳐서 1990년에는 75%로 된 사실이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대기업의 지배력이 경영자에서 소유자로 이행, 즉 '경영자 자본주의에서 투자자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41]

최근 일본의 외국계 3,117개 기업(자본금 5,000만 엔 이상, 외화비율 49% 이상)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모기업이 미국 국적인 기업은 감소하는 경향이라고

39 「ルノー, 日産株36.8%取得, 資本提携を発表」, 『日本経済新聞』 1999. 3. 28 조간).
40 「戦後70年 日本のかたち⑪ 日米経済摩擦」, 『日本経済新聞』 2015. 9. 13 조간).
41 ロナルド・ドーア, 『金融が乗っ取る世界経済 21世紀の憂鬱』, 中公新書, 2011, 35~36쪽.



〈그림 3〉 소유자별 주식보유비율의 추이

출처: 일본증권거래소 그룹 홈페이지, 「株式分布状況調査」.

해도 전체의 37%로 유럽국가 42%와 비슷해 아시아국가의 17%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1991년 이후에 진출한 기업의 비율이 59%라는 것은 최근 진출한 기업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42] 일본의 전체 상장기업 가운데 외국인(법인 및 개인) 소유 주식의 비율은 〈그림 3〉에 나타나는 것처럼 1990년 당시에는 4%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13%, 2010년에는 22%로 상승했고, 2014년에는 28%, 금액으로는 32%에 달했다. 1990년부터 2010년간 외국인 주주의 증가는, 같은 기간에 금융기관의 소유 주식 비율이 45%에서 23%로 하락한 것과 정합적이다. 일본의 사업법인과 개인의 소유비율은 대체로 각각 20%대로, 1990년 이후의 변화를 특징짓는 것은 금융기관 소유비율의 하락을 보충하는 형태로 외국인 소유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43]

원래 일본은 제2차 대전 전후에도 외국자본 도입에 경계심이 강해, 기술은 도입하지만 자금은 자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외국인이 일

42 『外資系企業総覧2015』, 週刊東洋経済臨時増刊, 2015. 7. 6, 147쪽.

43 일본증권거래소 그룹 홈페이지 「株式分布状況調査」. 그래프에는 정부·지방공공단체(0.1~0.6%)와 증권회사(0.8~2.5%)의 표시는 생략했다.

본에 자본을 투자할 때에는 '장벽'이 많았다. 그러한 외자도입의 '장벽'을 제거하고 일본경제를 미국 자본이 투자하기 쉬운 형태로 개혁하자는 것이 이른바 '연차개혁요망서'로 1994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년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제출해왔다. 2007년까지 미국의 요구를 조사한 연구[44]에 따르면 ① 1996년: 인재파견의 자유, ② 1997년: 대점법(대규모소매점포법) 폐지, ③ 2000~2007년: 외국기업의 일본 진출, 미국형 경영형태화, 합병 용이화, ④ 1999~2004년: 간이보험의 축소 폐지, 우정공사의 민영화, ⑤ 2001~2007년: 의료제도개혁, 혼합의료, 주식참가의 각종 요구가 있다. 이 중 ⑤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개정으로 실현되었다. 이하 ④ 우정공사의 민영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정공사민영화를 주장하는 고이즈미 내각이 2001년에 성립되고 2005년 민영화 법안 부결 후에 실시된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여 우정민영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고이즈미 총리가 우정개혁을 구조개혁의 중심이라고 주장한 것은, 우편저금과 간이보험을 민영화하여 340조 엔의 세계 최대규모의 자금이 '관'에서 '민'으로 이동함으로써 국채 발행이 억제되고 재정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의 경제불황 중에 왜 긴축재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다. 그간의 사태의 추이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고이즈미 총리 개인의 신념과 은행·경제단체연합회 등 재계 주류의 의도뿐 아니라 미국의 우정민영화 요구라는 외부의 압력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2003년 10월 '일미규제개혁 및 경쟁정책 이니셔티브에 근거한 일본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연차개혁요망서"[45]는 첫머리에서 "미국은 일본이 의미 있는 경제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올해 9월 22일 고이즈미 총리가 새 내각은 '계속하여 규제개혁에 주력'하고 동시에 '개혁 없이 성장 없다'라는 정책을 견지한다고 표명한 것을 기

44 大門実紀史, 『新自由主義の犯罪: 「属国ニッポン」経済版2』, 新日本出版社, 2007, 33쪽.
45 https://ja.wikipedia.org/wiki/年次改革要望書.

쁘게 생각한다. 본 요청서에 담긴 제언은 주요 분야 및 분야횡단적 과제에 관한 개혁조치를 중시했으며,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노선으로의 복귀와 일본시장의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통신, 정보기술(IT), 의료, 에너지, 경쟁정책, 고이즈미 내각이 개혁에 중요하다고 규정한 분야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하여, 고이즈미 내각의 경제정책 중 개혁 전반에 대해 상세한 주문을 하고, 그 개혁들이 미국자본의 '일본시장의 개방'을 촉진하도록 '요망'한다는 형태로 사실상 '내정간섭'을 한 것이다. 우정개혁에 대해서는 '투명성 및 기타 정부관행'이라는 제7항목 중 'V. 우편금융기관'에서 지적되고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지 못하지만, 미국 정부의 관심이 우정민영화 가운데 오로지 우편저금과 간이보험에 집중되어, 그 개혁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일본에서 활동하는 미국계 보험회사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공개와 의견청취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04년 9월 고이즈미 내각의 경제재정자문회의가 결정한 민영화의 기본방침에서는 10년 내에 금융사업을 우편사업에서 분리하여 완전히 독립시킬 계획이었기 때문에, 금융사업의 지원 없이 우편사업이 경영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융사업이 외자에 인수될 위험이 없는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즉 2005년 4월 국회에 제출된 우정민영화 관련법안 심의에서는 미국의 압력과 미국의 자본에 인수될 위험에 대해 질문이 집중됐다. 5월 31일 중의원 우정민영화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전 재무성 관료였던 자민당의 고이즈미 류지(小泉龍司) 위원이 "미국의 압력이라는 것이 자주 거론되는데"라며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46]

> 미일 사이에 '연차개혁요망서'라는 것이 있어서 매년 가을에 미국에서 일본 정부에 이것이 전달된다. 900명의 중앙관청 과장에게 이것이 쪼개 나누어져, 일년 후의 목표를 향해 조금씩 양보한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놀이처럼,

46 『第62回国会, 衆議院郵政民営化に関する特別委員会録』 제5호, 2005년 5월 31일, 14쪽,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한 번에 조금씩이지만 착실히 목표에 다가간다. 그러다 정신차려 보면 이 연차개혁요망서 항목이 거의 다 실현되어 있다. 일본의 가까운 미래를 보려면, 장래 투자를 위해 주식을 사려고 한다면 이 연차개혁요망서를 보라는 정도로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다. 보험 문제를 비롯해서 현재는 우정민영화가 내정간섭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꼼꼼하게 미국의 요망사항으로 쓰여 있다.

이에 따르면 재무성에서의 집무 경험에서 볼 때 미국 정부의 '요망'은 일본 정부의 관료기구에 의해 거의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6월 7일의 위원회에서도 자민당의 전 외무성 관료인 기우치 미노루(城内実) 위원이 "유초은행(郵貯銀行, 우정민영화에 의해 우체국에서 은행 부문을 독립시켜 만든 은행-역자 주) 등의 체력이 약해져 주가가 떨어지면 장기신용은행의 예와 같이 주식을 전부 사들여 지배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유초은행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외자규제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질문했지만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蔵) 국무대신은 "적대적 인수에 대한 방어책"에 대해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새 회사 설립 때 경영자도 적절하게 판단해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알맹이 없는 답변에 그쳤다. 그러자 기우치 위원은 "정부는 그러한 방어책으로 외국자본의 인수를 막을 수 있다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이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외자에 의한 인수위험을 저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47] 이처럼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대론이 속출했기 때문에 8월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정부법안은 부결되었고, 고이즈미 총리의 국회 해산이라는 묘책이 적중해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민영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상의 우정민영화 경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여 일본 정부의 내부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1990

47 『第62回国会, 衆議院郵政民営化に関する特別委員会録』 제9호, 200년 6월 7일, 23~24쪽,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년대 말 외환위기 때 IMF 등에서 긴급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재정긴축, 금융긴축, 무역·자본자유화, 규제완화, 기업구조개혁 등을 요구받아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는 달리,[48] 일본에서는 정부와 재계, 저널리즘, 학계 내부에서 미국 정부의 의향을 헤아려 자신의 의견으로 표명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부드러운 형태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49] 단, 일본 정부의 대미 자세가 항상 미국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2009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하토야마(鳩山由紀夫) 내각처럼 우정민영화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 주일 미군기지를 재검토하고 일본·한국·중국으로 구성되는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자주' 외교노선을 표방한 적도 있었다. 그러자 곧바로 미국이 여러 수단을 통해 하토야마 총리를 퇴진으로 몰아간 것은 기억이 새롭다.[50]

왜 정부가 우정민영화를 황급히 실현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투자회사가 간포생명(簡保生命, 우정민영화에 의해 우체국에서 간이보험을 독립시켜 만든 생명보험회사—역자 주)과 유초은행의 주식을 사들인 후 이들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들 회사의 자금으로 미국 국채의 구입과 외자자금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정부의 집요한 우정민영화 '요망'을 생각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우정자금은 '투자가자본주의' 미국의 세계전략에 큰 자금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51]

문제는 우정민영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차개혁요망서의 계획에 따라 미국 자본의 일본 진출의 길이 마련되어, 이제까지

48 菊池英博, 『新自由主義の自滅: 日本·アメリカ·韓国』, 文春新書, 2015, 97~112쪽.

49 이 점을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과 우정민영화를 담당했던 다케나카 국무대신에 초점을 맞춰 구명한 연구로 佐々木実, 『市場と経済, 「改革」に憑かれた経済学者の肖像』, 講談社, 2013이 있다.

50 孫崎享, 『戦後史の正体 1945~2012』, 創元社, 2012.

51 菊池英博, 『そして, 日本の富は略奪される: アメリカが仕掛けた新自由主義の正体』, 177~178쪽.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 연구자에 의해 일찍이 지적되었다. 예를 들면 호주국립대학 명예교수인 가반 매코맥(Gavan McCormack)은 "우정민영화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요구 항목의 상위에 있었으며 고이즈미 내각은 이미 미국의 장기채권과 중기채권을 구입하여 미국경제의 안정에 크게 공헌하고 있었다. 우정민영화는 부시 정권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맥이었고 미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지지해 제국의 정책에 일조하는 정책이었다. 우정민영화의 방해가 제거되어 머지않아 일본의 거대 저축자금을 움직이는 날이 올 것으로 미국 민간투자기관의 기대는 한껏 부풀어 있다"(『属国(Client State)』(新田準訳, 凱風社, 2008, 82쪽)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경제를 지탱하던 '일본적 경영'의 근간을 이루는 장기고용에 기초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이노베이션의 조건을 붕괴시킨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다카하시 노부아키(高橋伸彰)가 미즈노 가즈오(水野和夫)와의 대담에서 장기고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52]

> 일본적 고용시스템이 건재하던 시기에는 고용상태의 악화에 경영자가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외국인 주주 비율의 상승에 따른 영향도 있어서 이제는 노동자는 양성의 대상이 아니라 쓰고 버리는 것이라는 발상으로 바뀌는 바람에, 고용상태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기업이 양성하지 않고도 기업 외부에 노동자를 양성하는 제도가 있다면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기능은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모두 현장에서 양성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후배를 양성하는 여유와 동기가 없어지면 노동자는 양성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고용은 노동자를 현장에서 양성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고용상태의 악화는 그것을 촉진한 정부의 노동정책이 문제일 것이다. 미국에서 공부한 관료와 학자들은 미국처럼 고용을 다양화하고 유동화하는 방향으로 노동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한 '개혁'이라고 믿고 있지만, 일본의 노동시장 실태에 대한 인식이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다카하시가 언급하고 있듯이 "기업의 외부에 노동자를 양성하는 제도"가 있거나 신규졸업자 이외의 사람을 위한 고용기회가 충분하다면 어떨지 몰라도 일본처럼 일단 비정규직 고용으로 전락하면 거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개혁'은 고용상태의 악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 보면, 라이벌 일본의 일본적 경영의 위기는 미국 경제회생의 기회일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경영방침과 경제정책을 일본인 경영자나 일본 정부가 스스로 채용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일

52 高橋伸彰 · 水野和夫, 『アベノミクスは何をもたらすか』, 岩波書店, 2013, 85~86쪽.

뿐이다.[53]

7. 맺음말

고이즈미 내각의 시장원리주의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아베 내각도 채택하여 미국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아베노믹스가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2008년 리먼쇼크로 미국의 '투자가자본주의'에 의해 주도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정적인 결함이 폭로되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일본적 경영이 갖는 보편적 성격에 대한 재평가도 일어나고 있지만,[54] 일본 정부와 민간의 주도적인 흐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전처럼 미국을 추종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실패원인이, 민간기업이 일본은행과 정부의 노력에 호응하여 활발히 해야 할 투자를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55] 그러나 정작 경영자는 "금리가 내려도 경기전망이 불투명

53 물론 정부도 고용 개선을 위해 검토하고 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하여 2019년에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朝日新聞』, 2016. 5. 14 조간). 그러나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관행적으로는 일본 임금체계의 기본이 '일'의 내용에 기준하는 '직무급'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에 기준하는 '직능급'이기에 동일노동의 판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고(「同一賃金」経済界の本音」, 『日本経済新聞』, 2016. 4. 24 조간), 경제적으로는 정규고용을 감소시켜 비정규노동에 의해 대체해온 이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민간기업은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정규고용을 정규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개선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54 예를 들면 『이코노미스트(エコノミスト)』, 2015. 8. 11·18일 호는 「전후 70년 일본경제 역사와 미래」(戦後70年 日本経済 歴史と未来)라는 특집을 편성했는데, 手塚貞治, 「일본적 경영: 시대에 따라 평가가 변한 일본적 경영」(日本的経営: 時代で評価が変わった日本的経営)에서 '사원중시에 의한 장기적 관여'를 일본적 경영의 본질로 규정하고 그것이 보편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시대와 함께 변화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즉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서 일본경제가 발흥하여 세계적으로 예찬된 시스템이 되었지만 1990년대가 되어 일본경제의 성과가 악화되자 예찬에서 역풍으로 갑자기 바뀌어 미국형 경영이야말로 세계적 기준이 되었지만 "2008년의 리먼쇼크에 의해 미국형 경영에 의문이 생겨 또다시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이 2010년대 중반의 현시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데즈카(手塚)는 "인재비용을 진정한 의미의 '인재투자'라고 생각하는 기업만이 경쟁우위성을 구축하는 '경영전략'으로 일본적 경영을 채택할 것이다"고 주장한다.

55 예를 들면 『日本経済新聞』, 2016. 3. 5 조간 칼럼(大機小機)에서 「마이너스 금리와 경영자의 국가관」(マイナス金利と経営者の国家観)이라는 제목으로 "민간 측에는 정책의도를 정당하게 받아들여 국민경제의 번영을 추구하려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든 노력하여 세계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설비투자에 도입한다. 그럼으로써 전체 생산성을 향상시켜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

하기 때문에 설비투자를 단행할 수 없다"고 열악한 투자환경을 문제삼고 있다.[56]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투자환경의 정비에 있는 것이지 경영자에게 투자와 임금 인상을 권유하는 데 있지 않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엔진 출력이 약해져서 성장둔화의 조짐이 보이는 세계경제에 필요한 것은 "국경을 넘어 자유무역과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을 다시 점화시키는 정치의 주도력이다. 그런데 그 정치가 혼돈 상태에 있다. …정치의 혼란이 세계경제에서 간과할 수 없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57]는 정확한 지적이 있다. 현재 아베 내각은 경제 면에서 민간 대기업이 대량으로 축적한 내부자금을 설비투자와 임금 인상에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정치외교 면에서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부응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용병으로 전쟁의 위험을 끌어들이고 있는 아베 정권 아래에서는 민간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활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본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거 일본적 경영이 가지고 있던 장기적 시야에서 설비투자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재창조하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 국내 소비수요의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사회보장을 충실하게 하여 일하는 사람들과 은퇴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것이 이노베이션을 한층 더 활성화시킬 것이다. 여기에서 이노베이션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에 견딜 수 있는 '인티그럴형'을 중심으로 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화하는 일본의 인구감소와 지구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 세계경제의 안정과 확대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미국 일변도의 종속적 외교자세에서 벗어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나라와 우호관계를 유지·확립하며 평화롭고 안전한 시장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

여 일본의 상황을 개선시킨다. 이러한 의식과 사명감이 민간에는 약한지 정책효과가 퍼져나가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경영자는 나라의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길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 전형일 것이다.

56 「もたつく景気②広がり欠く設備投資」(『日本経済新聞』, 2016. 4. 13 조간).

57 「もたつく景気③世界, 頼れぬ「米中」エンジン」(『日本経済新聞』, 2016. 4. 14 조간).

해야 한다. 일본경제의 재생을 위한 관건은, 그러한 정치와 외교 방안을 포함하여 일본 민중이 독립국에 걸맞는 주권자로서의 자각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58]

*이 글의 원문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선재원(평택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이 번역했다.

58 일본인이 일본 정부를 매개로 한 미국에의 종속적 지위를 확실히 자각하지 못하는 역사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일본인은 그리스·로마와 진한(秦漢) 제국에서처럼 인민이 국가권력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원리에 입각한 고전고대사회를 경험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전쟁의 패배를 계기로 비로소 국민주권의 헌법을 획득했지만 전후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권자로서의 자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인이 짊어진 그러한 부정적인 역사에 관해서는 石井寛治, 『資本主義日本の歷史構造』, 부론2 「個別的価値から普遍的価値へ」를 참조하길 바란다.